

북핵일지

2009 ← 1955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1955~2009

인 쇠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비매품

디자인·인쇄 NEULPUM* (주) 늘플플러스

Tel. 070-7090-1177

© 통일연구원, 2009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핵일지 : 1955~2009 / 조민, 김진하.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정책연구시리즈 ; 09-05)

ISBN 978-89-8479-547-1 93340 : 비매품

북핵[北核]

349.9-KDC4

327.174-DDC21

CIP2009004257

북핵일지

1955~2009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 초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핵개발 노선을 택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의 집요한 핵보유 의지의 소산이다. 이에 통일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해 북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북핵일지를 정리하였다. 향후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핵일지를 계속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1955

일 시	내 용
1955. 3	북,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
1955. 6	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과학원 학자 6명 참석
1956. 2. 28	북,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Founding Charter of the Soviet Union's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체결 (모스크바), 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 북 과학자 파견, 방사화학연구소 설립
1956. 3	소련과 '조·소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1962. 11. 2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립
1963. 6	소련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We) 도입
1965	연구용 원자로 준공
1967	연구용 원자로 가동
1968	소련서 소형 임계시설 도입 (영변)
1974. 3	북, 원자력법 제정
1974. 9	국제원자력협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가입 (한국, 1957. 8 가입)
1976	북, 이집트서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B형, 사정 234km) 2기 도입
1977. 9	북, IAEA와 연구용 원자로(IRT-2000)에 대한 '부분 안전조치협정' 체결
10	IAEA, 북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최초 핵사찰
1978. 11	북 전역 우라늄 탐사 (약 2,600만톤)

일 시	내 용
1980. 7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흑연감속로) 착공 (1986년 가동, 1994년 동결, 2003년 재가동)
1982. 11	북,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83. 11	북,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1984. 4	북, 스킨드 미사일(B형) 시험발사 성공
1985. 11. 5	북, 영변 50MWe 마그녹스 원자로 착공 (1995년 완공목표, 1994년 중단)
1985. 11	북,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1990년 완공목표, 미완공)
1985. 11	북,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착공 (1989년 가동)
1985. 12. 12	북,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 (한국, 1975. 4 가입) 소련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협정' 체결, 440MWe급(VVER-440형) 4기의 원자력 발전소 (함경남도 신포) 건설예정
1986. 1	북,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개시 (연 6kg 플루토늄 생산가능)
1986. 5	북, 스킨드 미사일(C형) 시험발사 성공
1986. 12	북, 정무원 산하 원자력공업부 신설
1987. 6. 5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에 전달
1989. 9	프랑스 위성 스팟 2호(SPOT: Satellite Probatoire d'Observation de la Terre), 영변 핵시설 촬영 및 공개
1989. 11	북, 200MWe 원자로 착공 (태천)
1989	영변 5MW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약 8,000개, 25~50톤) 인출

일 시	내 용
1990	북, 재처리 시설에서 대규모 Hot Test 실시
1990	북, 청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90. 2	북, IAEA 이사회에 안전조치 체결 조건으로 대북 핵 불사용 및 불위협 명시를 요구
1990. 3. 6	IAEA 이사회, 북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0. 9. 4 ~ 12. 14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3회)
11. 16	주유엔 북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시 IAEA의 사찰을 수락하겠다”
1991. 4	북, IAEA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6. 5	미-북 고위관리, 워싱턴서 첫 접촉
6. 11	북, “핵안전협정 문제에 관해 미국과 조건부 합의했다” 발표
6. 21 ~ 22	미 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 방북, 북 군축 평화연구소 대표단과 토론회
7. 30	북 외무성,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제안
9. 12	IAEA 이사회, 북의 핵안전협정 조인 촉구 결의안 채택 (북 거부)
9. 18	남북, UN 동시 가입
9. 21	IAEA 총회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결의안’ 채택
9. 27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미 대통령,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
10. 22 ~ 25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10. 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일 시	내 용
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1. 25	북 외무성 성명,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시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겠다”
12. 11	한, 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제의
12. 13	남-북,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 서명
12. 17 ~ 19	스티븐 솔라즈(Stephen Solarz)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 주석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피력
12. 18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 부재” 선언
12. 22	북 외무성,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 수락하겠다” 성명
12. 26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1차 실무접촉 (판문점 통일각)
12. 28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2차 실무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12. 31	남북 핵협상 고위급회담 3차 실무접촉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92. 2. 19 발효)
	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③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④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일 시	내 용
1992. 1. 1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공정성 보장시 핵사찰 수락' 용의 피력
1. 7	북, '안전조치 협정' 서명 및 IAEA 사찰 수용 발표 한미 팀스피리트(T/S) 훈련 중단 발표
1. 22	미북 최초 고위급회담 (켄터-김용순, 뉴욕)
1. 30	북,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92. 4. 10 발효)
2. 19 ~ 3. 14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7차례)
2. 25	북, 외교부 순회대사 통해 IAEA 핵사찰 수용
3. 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4. 10	북 최고인민회의-IAEA, 안전조치협정서 비준
5. 4	IAEA에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제출 (7개 핵시설과 플루토늄 보유)
5. 11 ~ 16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 방북,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관 방문 허용 촉구
5. 28	미국 자유연합대표단(단장: 리처드 아이코드 하원의원) 방북, 김일성 주석 면담
5. 25 ~	IAEA, 임시 핵사찰 실시
1993. 2. 6	1차: 92. 5. 25~6. 5 / 2차: 92. 7. 8~18 3차: 92. 9. 19~11 / 4차: 92. 11. 2~13 5차: 92. 12. 14~19 / 6차: 93. 1. 26~2. 6

일 시	내 용
	<p>중대한 불일치(significant discrepancy) 발견</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5MWe 흑연감속로 형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 (80~90g)의 플루토늄 추출 • IAEA: 최소 3회('89, '90, '91)의 플루토늄 추출 확인,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시설이고 2개의 미신고시설은 재처리한 핵폐기물의 저장소임을 확인
1992. 7. 2	미 국방부, 한국 내 핵무기 철수 완료 발표
12. 12	IAEA에 핵폐기물 보관 의심시설 2개 중 1개 육안사찰 허용
12. 22	IAEA, 북에 2개 미신고시설 방문 허용 요청 (북 거부, '93. 1. 5)
1993. 2. 9	IAEA, 북의 미신고시설 2개 '특별사찰' 수용 촉구 (북 거부, 2. 24)
2. 21	노동신문, '특별사찰 강요하면 전쟁초래' 경고
2. 23	울시 CIA 국장,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 최소 1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물질 보유' 주장
2. 25	IAEA 정기이사회, 북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수락까지 1개월 시한)
3. 8	북, 준전시 상태 선포
3. 12	<p>NPT 탈퇴 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북한 NPT 탈퇴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 2. 25 IAEA 이사회의 핵사찰 허용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
3. 15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대통령, 북에 NPT 탈퇴 재고 요청

일 시	내 용
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 결의안 채택 (특별사찰 수락 3월 31일로 연장)
3. 31	IAEA 특별이사회, 북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4. 1	IAEA 이사회,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안’ 발표
4. 8	유엔 안보리, 북핵문제 관련 ‘의장성명’ 채택
5. 11	유엔 안보리, 북의 핵사찰 수용과 NPT탈퇴 철회 촉구 결의안(825호) 채택
5. 17 ~ 21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카트먼-김중수)
5. 29 ~ 30	북,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동해)
6. 2 ~ 11	1차 미북 고위급회담 (갈루치-강석주, 뉴욕), 북 NPT탈퇴 잠정 유보 (11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등 원칙 확인
7. 14 ~ 19	2차 미북 고위급회담 (제네바), 북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과 미신고시설 사찰 문제 등을 논의
8. 4	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8. 9, 북 거부)
8. 31 ~ 9. 4	IAEA 사찰단 방북 (제한된 활동)
10. 1	IAEA, 안전조치(Safeguards) 이행 촉구
11. 1	유엔 총회, 즉각적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핵 결의안 채택
11. 11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북 핵협상 대표단장), 미국에 일괄타결안 제의

일 시	내 용
11. 14	북,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중단
12. 1	북, IAEA에 전문 보내 “핵 위기 상황의 악화는 IAEA 측의 책임”
12. 3	IAEA 사무총장,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능 선언
12. 23	북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차수, 1990년 대안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언명
12. 29	미-북, 뉴욕 실무접촉서 핵사찰 수용 합의 발표 IAEA 사찰 허용, 남북 실무회담 개최,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3차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1994. 1. 7 ~ 2. 15	북-IAEA, 안전조치 유지를 위한 실무접촉 실시 (총 7회)
1. 31	북, “미국이 북한 측에 핵 전면사찰을 계속 요구할 경우 NPT탈퇴 유보 결정을 철회” 경고
2. 15	IAEA, 북 핵사찰 수용 발표
2. 25	미-북, 핵사찰 합의 내용 ('93. 12. 29)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 남북회담 재개 • IAEA 사찰 개시 (3.3~12)
3. 3 ~ 14	IAEA, 북의 핵 의심 시설 7곳에 대한 사찰을 실시했으나, 북의 시료 채취 거부로 재처리시설 추가건설 사실만을 확인
3. 3 ~ 16	남북 실무회담 개최 1차(3일), 2차(9일), 3차(12일), 4차(16일)
3. 19	5차 남북 실무회담서 박영수 북 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3. 21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정
3. 24	IAEA 사무총장, 북핵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

일 시	내 용
3. 28	북 외무성,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배차 중지 촉구
3. 31	유엔 안보리, 북의 추가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4. 7	클린턴 미 대통령, 대북정책을 조율할 '고위정책그룹' 설치 지시
4. 10	북, 영변 5MWe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인출 준비 추정)
4. 18	미,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배치
4. 28	북,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 선언
5. 4	북, 영변 5MWe 흑연감속로에서 연료봉 인출 경고 (6. 15까지 약 50톤 8천여개 인출)
5. 17 ~ 24	IAEA 추가/후속사찰 실시 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의 임의 인출 감행 및 시료 채취 요구 거부
5. 27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유엔 안보리에 "북의 사용 후 연료봉 무단인출로 과거 핵활동 관련정보 습득 불가능" 보고
	미 국무부, 3차 미북 고위급회담 취소 발표
5. 30	유엔 안보리, 북에 핵 연료봉 인출에 관한 협상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
6. 3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 한·미·일과 3차 협의 후 공동성명 발표
6. 10	IAEA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연 60만 달러의 기술원조 중단 및 대북 지원금 대폭 삭감)
6. 13	조선중앙통신, 'IAEA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일 시	내 용
6. 14	미, 장관급 회의 중 ‘대북 공격(Osirak Option)’ 검토
6. 15	미,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 1단계: 무기금수와 문화기술과학교육교류 금지 • 2단계: 대북 무역 및 금융거래중단
6. 15 ~ 18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 대통령 방북, 김일성 주석 회담 카터 전 대통령 방북결과 서울 기자회견 (6. 19): 북, 핵활동 동결 및 핵 투명성 보장 용의, IAEA 사찰관 잔류 허용, 경수로 지원시 구형 원자로 폐기, 미군 유해발굴 허용, 남북 정상회담 제의 (김영삼 대통령 정상회담 제의 수락)
6. 24	러 이스베스차(Izvestia), 1990년 KGB 보고서를 인용해 북 1990년 시제(試製) 핵 폭발 장치 이미 생산 보도
7. 8 ~ 10	3차 미북 고위급회담 (제네바)
7. 8	김일성 사망 (7. 9 공식발표)
8. 5 ~ 12	3차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제네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밀봉 보관, 대체에너지 보장 등 4개항 합의
9. 1	중, 군사정전위원회 철수 통고
9. 10 ~ 13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1차 실무자 회담 (평양)
9. 10 ~ 14	미북 실무급 전문가회의 개최 (베를린) 북, 경수로 대신 재래식 병합 발전소 요구
9. 23 ~ 10. 17	3차 미북 고위급회담 두번째 회의 (제네바) 합의 틀(Agreed Framework) 도출

일 시	내 용
9. 28	북 인민무력부 대변인, '특별시찰을 통해 군사 대상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 주장
10. 21	제네바합의문(조미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흑연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 동결, 경수로 완공시 핵시설 해체 • 미: 2003년까지 1,000KWe급 경수로 2기 제공, 이전까지 매년 연간 중유 50만톤 공급
11. 1	북, 제네바 합의문에 따른 핵 활동 동결 선언 5MWe 원자로 재장전 계획 취소와 50MWe·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발표
11. 7	한, '핵-경협 연계' 대북 경협 축소 완화 방침 표명
11. 14 ~ 18	미 전문가 그룹 방북, 소비된 핵 연료봉 보존 문제 논의
11. 23 ~ 28	IAEA 방북 전문가 그룹, 핵동결 감시 검증 절차 논의 및 영변 태천 핵동결 사실 확인
12. 1	한, 평시 작전통제권 회수
12. 11 ~ 12	폴 사이먼(Paul Simon)·프랭크 머코스키(Frank H. Murkowski) 상원의원 방북,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제네바 합의 이행 논의
1995. 1. 6	북, 경수로 공급 계약서에 한국형 명기 거부
1. 15	미, 대북 중유제공 개시
1. 21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정보·통신, 금융거래 등)
2. 15	북 외무성, 한국형 경수로 강요 시 북미합의 파기 경고

일 시	내 용
2. 24	북 외무성, 평화체제 수립 요구 담화문 발표
3. 9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1차 집행이사회 뉴욕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이사국: 한국, 미국, 일본, EU • 일반회원국: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3. 25 ~ 27	미-북, 경수로 전문가회담 개최 (베를린), 북, 한국형 경수로 거부
4. 7	KEDO 2차 집행이사회 (뉴욕), 한국형 경수로 채택 재확인
5. 19 ~ 6. 12	미-북, 준고위급회담(허바드-김계관, 쿠알라룸푸르)서 경수로 협상 타결 (한국형 경수로)
6. 17 ~ 24	미 기술진 방북,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여기 처리 확인
8. 23	북, UN에 수재 긴급구호 요청
9. 2	UN 수해조사단 방북
10. 31	UN 총회, 북의 핵안전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12. 15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000MWe급 가압경수로 2기 (한국 표준형)
1996. 1. 30	IAEA 대변인, 북 주요 핵시설 사찰 거부 언급
2. 14	한 국방부, '96 T/S 훈련 중지 발표
2. 22	북, 대미 평화협정 제의
3. 19	KEDO, 주계약자로 한국전력 선정
4. 4	북, 비무장지대에서 임무 포기 발표

일 시	내 용
4. 16	한·미, 북에 한·북·미·중 4자회담 제의
4. 20 ~ 21	미북 1차 미사일 회담 (베를린)
4. 27	폐연료봉 8,000여개 밀봉작업 개시
5. 1	미 국무부, 북의 핵연료봉 봉인 착수 발표
5. 7	북 외무성, 4자회담의 취지 설명요구
7. 11	KEDO-북, 3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통신·통행)
9. 10	UN 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9. 18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9. 20	IAEA, 북의 과거 핵 운용 공개 촉구
9. 23	IAEA-북, 6차 실무회담 (빈) 북, 과거 핵활동 거부
10. 15	유엔 안보리, 잠수함 침투사건관련 의장성명 채택
10. 29	유엔 총회,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대북결의 채택
1997. 2. 11	유엔, 북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서명 촉구
3. 5	4자회담 공동 설명회
6. 11 ~ 13	미-북, 2차 미사일 협상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미사일 수출, 생산, 개발, 배치 포기 요구 • 북: 보상받을 시 수출 금지는 고려, 생산·개발·배치 포기는 불가
7. 28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공사 착수
7. 28	4자회담 실무접촉 (뉴욕)

일 시	내 용
8. 5	4자회담 1차 예비회담 (뉴욕)
8. 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9. 18 ~ 19	4자회담 2차 예비회담 (뉴욕)
10. 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취임
10. 31	미, 5MWe 원자로 폐연료봉 8,000개 밀봉 완료 발표
11. 21	4자회담 3차 예비회담 (뉴욕)
12. 9 ~ 10	4자회담 1차 본회담 (제네바)
1998. 1. 15 ~ 24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평양 주재 미국연락사무 소장 내정자 방북
3. 16 ~ 20	4자회담 2차 본회담
6. 16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위협에 대항키 위해 미사일을 계속 개발, 시험, 배치할 것이며, 북의 미사일 판매를 종료시키길 원한다면, 대북 경제 봉쇄를 풀고 보상을 해야할 것 주장
8. 7	뉴욕 타임즈, 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
8. 20	북, 방북 미 하원 관계자에게 미국이 식량 100만톤과 5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 4자회담 진전, 이란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판매 중단 제의
8. 21 ~ 9. 5	미북 고위급회담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특사, 김계관 외교부부부장)
	지하 핵 의혹시설, 핵 연료봉 처리, 미사일회담 재개 등 합의
8. 31	북,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발사 (일본 열도 관통) * 8월초 중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방북

일 시	내 용
10. 1 ~ 2	미-북, 3차 미사일 협상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미사일 시험발사, 수출, 개발/생산/배치 중지 요구 • 북: 3년간 30억 달러 제공시 수출 중지가능
10. 21 ~ 24	4자회담 3차 본회담 (제네바)
11. 9	KEDO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공사비(48억 달러)의 70% • 일: 10억불 상당의 엔화 • 미: 잔여 3억 8천만 달러 조달 책임
11. 16 ~ 18	미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1차 협상 (평양)
11. 23	윌리엄 페리(William James Perry),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12. 4 ~ 11	미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2차 협상 (워싱턴)
1999. 1. 16 ~ 24	미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3차 협상 (제네바)
1. 19 ~ 22	4자회담 4차 본회담 (제네바)
2. 27 ~ 3. 16	미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4차 협상 (뉴욕)
3. 16	미-북,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1999년 5월 중순 - 2차: 2000년 5월 - 3차: 미국 요청 시 • 미, 북에 식량 60만톤 및 감자사업 지원

일 시	내 용
3. 29 ~ 30	미북 4차 미사일 회담 (평양)
3. 31 ~ 4. 3	미북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5차 협상
5. 18 ~ 24	<p>미 금창리 방문단(미 국무부 한국과 조엘 위트(Joel Wit) 외 14명, 1차 현장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거대한 복합터널) • 미국의 입장: 기본합의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가 원자로 건설 합의문 위반
5. 25 ~ 28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 방북
6. 5	서해교전(제1연평해전) 발생
8. 4 ~ 9	4자회담 6차 본회담 (제네바)
9. 2	인민군 무력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9. 7 ~ 11	미북 고위급 미사일회담 (베를린), 미사일 발사 유보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 지원 교환
9. 15	<p>페리, 대북정책권고안(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페리보고서) 의회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추진 3단계 (Perry Proc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단기) ② 북의 핵, 미사일 개발중단보장 (중기) ③ 한반도 냉전 종식 (장기)

일 시	내 용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 미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 한·일과의 고위정책 조정감독그룹 존속 -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 북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9. 17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9. 24	북 외무성,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10. 1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0. 13	미 상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 부결
10. 23	러, 북한행 열차서 방사능 검출, 북·러 핵 밀거래 의혹 증폭
10. 28	KEDO, 초음파 유량 측정기로 대북 중유 감시 중유공급지역(공급비율): 선봉(59%), 평양(15%), 북청(15%), 청진(5%), 동평양(3%), 순천(2%), 영변(1%)
12. 15	KEDO-한국전력, 주계약 공식서명

일 시	내 용
2000.1. 22 ~ 28	미북, 베를린회담서 미북 워싱턴 고위급회담 합의
2. 2	북, 경수로 지연 이유로 제네바 합의서 파기 경고
2. 15	경수로 본공사 착공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남북 간 공식 대화 재개를 위한 경제지원 확대 언명
3. 15	미북 1차 테러회담 (뉴욕)
4. 18	북, 폐연료봉 밀봉 완료
5. 24 ~ 25	미, 금창리 2차 사찰 (1차 사찰 결과와 상이점 발견 못함)
5. 29 ~ 3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담)
6. 13 ~ 15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 시	내 용
6. 19	미 클린턴 대통령, 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7. 10 ~ 12	미-북, 제5차 미사일 회담 (쿠알라룸푸르)
7. 19	북러 정상회담 (평양), 김정일, 러 위성 대리발사 시 미사일 계획 재고 용의
7. 27	미북 외무장관 회담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t Albright) - 백남순)
9. 27 ~ 10. 2	미북 3차 테러회담 (뉴욕) 북, 미에 김정일 특사 조명록 방미 제의
10. 6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측은 국제 테러가 용납될 수 없으며, 생화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배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②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의 반대 입장을 고려, 미국 측은 북한이 미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 위해 북한 측과 협력하는 데 동의
10. 9 ~ 12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김 위원장 특사로 방미
10. 12	북미 공동코뮤니케(US-DPRK Joint Communiqu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회복,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조 약속 (미군유해 발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 -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

일 시	내 용
10. 23 ~ 25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북 미사일 프로그램 논의
11. 1 ~ 3	제6차 미북 미사일 전문가회담 (쿠알라룸푸르)
12. 27	우즈베키스탄 KEDO 가입
2001. 1. 15 ~ 20	김정일 비공식 방중
1. 21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미국 대통령 취임
2. 1	핀란드 KEDO 탈퇴
2. 21	북 외무성 대변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
3. 3	북 외무성 대변인, 제네바 합의 이행관련 미국에 전력손실 대안 요구
3. 7	한미 정상회담 (김대중-부시), 부시 대통령 외부에 의한 북핵 검증 가능성에 대한 회의 및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표명
3. 22 ~ 23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노무인력 및 터빈·발전기 문제논의
5. 1	KEDO-북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향산)
5. 14	유럽연합(EU), 북과 수교 결정
5. 16	북,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하며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
6. 6	부시 대통령,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공식 선언

일 시	내 용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이 다음의 조건에 동의할 경우, 대북제재 완화, 경제 지원 및 기타 정치적 수순(political steps)에 관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협상할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지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한국에 대한 위협 감소 조치를 개시할 것 ② 1994년 합의 틀을 전진적으로 이행할 것 ③ 북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검증가능한 방식의 제한 조치에 동의할 것
6. 18	북, 미의 대화 제의에 유의 표명
8. 4 ~ 5	북리 정상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국제 분쟁들은 대결이 아닌,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합의 ② 북한 측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9. 4	북중 정상회담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하나의 중국정책 지지 • 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의 노력 지지
9. 11	미, 9·11 테러 발생
9. 25	IAEA,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0. 16	부시, 북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해야 국제적 신뢰받을 것, 미 전쟁 상황 악용은 오판 언급
11. 3	북, 2개의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결정
11. 12	북, 2개의 반테러협약 서명
11. 19	존 볼튼(John R. Bolton)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북이 이라크에 무기 제공 가능성 거론

일 시	내 용
11. 26	부시 대통령,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사찰 투명하게 받아야”
12. 14	유엔 총회서 대북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2002. 1. 29	부시,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
2. 1	북, “부시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
2. 20	<p>한미 정상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또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 김대중 대통령: ① 굳건한 한미동맹, ② 테러 근절 문제 계속 협력, ③ 북한의 WMD와 미사일 문제 해결, ④ 대화를 통한 해결에 부지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3. 13	미 국방부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대상 7개국(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에 북한 포함
3. 13	북, NPR에 반발 미국과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3. 20	미, 북의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에 대한 인증 유보
4. 3	북, 중단되었던 KEDO와의 협상 재개 용의 표명
4. 3 ~ 6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
4. 11	북, 미북 회담 재개 희망
4. 30	미-북, 대화 재개에 합의
4. 30 ~ 5. 4	KEDO-북,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직항공로 개설 협의)
5. 21	미 국무부, 북 테러 지원국 지정

일 시	내 용
6. 27	미북 뉴욕 실무 회동, 7. 10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북과 미북 평양 양자회담 논의 ('대담한 제안' 예고)
6. 29	서해교전 발발, 켈리 차관보 방북 계획 철회
7.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 31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에서 미북 외무장관 비공식회동 (백남순-파월)
8. 13	북, 미국의 핵사찰 수용 요구 거부
8. 29	볼튼 미 국무부 차관보, 북의 제네바 합의 이행 및 IAEA 사찰 수용을 재촉구
9. 16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미 국방장관, '북 이미 핵무기 보유' 주장
9. 17	북일 정상회담 (김정일-고이즈미, 평양), 일본인 납치사인 및 평양선언
10. 3 ~ 5	켈리 차관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강석주, "우리(북)는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어있다"
10. 16	켈리 특사, 북이 '고농축우라늄(HEU: Highly-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의 추진 시인' 발표 (2차 북핵 위기 돌출)
	미 국무부 대변인 긴급성명, 켈리 방북단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북한에 전했다며 북한측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10. 18 ~ 21	한·중·일 방문 중 켈리 특사, 북핵 프로그램의 철폐를 위한 '최대한의 국제적 압력(maximum international pressure)'을 끌어 모으기 위해 삼국과 논의 개시 언명

일 시	내 용
10. 20	콜린 파워(Colin Luther Power) 국무장관, NBC와 회견 중 북의 비밀 핵개발 계획으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nullified) 되었음을 표명
10. 21	부시 대통령, “북핵 문제를 우방국과의 공동의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해결” 언명 (로드 로버트슨 Lord Robertson 나토 사무총장과 회견 중) 김영남, 한국측 대표단과 회견 중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대화에 응할 것 발언
10. 22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압력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경고
10. 25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UEP 사실 무근 주장하며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중 장쩌민 주석, 한반도 비핵화(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강조 (부시 대통령과의 크로포드 목장 회동 중)
10. 26	한·미·일 정상, 북의 핵 폐기 및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APEC 참석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러: 북핵 평화적 해결 합의 • 한: 핵문제 신속하고 평화적 해결, 김대중 대통령 미에 제네바 합의 틀 깨지 말 것 주문 • 일: 핵개발 지속시 수교 교섭 및 KEDO 일시 중지 • 미: 북핵은 일본 겨냥한 것
10. 29	미 국방 및 국무장관,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핵 해결 방식 배제 표명
11. 2 ~ 5	도널드 그레그(Donald Phinney Gregg) 전 주한대사 방북 후, 북은 북핵 해결을 위한 동시적 조치(simultaneous steps)를 신뢰하는 듯 언명
11. 9	3차 남북 경제 협력 위원회 회담서 남북, 경제 협력,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설치 등 지속적 남북 협력 합의

일 시	내 용
11. 13	부시 대통령, 미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서 11월분 대북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 중유지원 중단 발표
11. 15	KEDO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중유 선적을 중단하며,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HEU 등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등 다른 KEDO 사업도 재검토 (뉴욕, 현지 14일)
11. 15	부시 대통령, 대북 성명 발표 (핵 폐기 촉구, 북 침공 않겠다)
11. 21	미 CIA 보고서 공개, '북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서, 2003년까지 7~8개의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추정
11. 21	북, 중유 공급 중단을 이유로 1994년 합의 틀 완전 파기 경고
11. 29	IAEA 이사회(Board of Governors), 북의 비밀 핵 개발 포기 및 지체 없는(without delay) 사찰 수락 요구 성명 채택 (오스트리아 빈),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결정
12. 2	러 푸틴 대통령과 중 장쩌민 주석, 공동선언에서 북에 비핵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미에 미북 관계정상화 촉구
12. 10	스페인과 미 해군, 북 선박 검색 및 예멘 행 스커드 미사일 부품과 고성능 폭발물 압류 (검색 전 마지막 기항지는 중국)
12. 12	북, 핵동결 해제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 • 한: NSC 긴급 소집 • 미: 유감표명
12. 13	북, IAEA에 핵동결 시설 봉인·감시 카메라 제거 요구

일 시	내 용
12. 19	노무현 대통령 당선
12. 21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IAEA 사무총장, 북의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확인
12. 21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 공장, 영변 8000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등에서의 북의 봉인, 감시 카메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봉인 해제 원상복구 촉구 • IAEA: 북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 지정
12. 23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봉인 감시 장치 제거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 북핵 대책 논의 •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와 북한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경고
12. 24	한국 외통부 관계자, 핵시설 봉인 제거 완료해 감시 체제 무력화 확인
12. 26	IAEA, “북한이 핵 연료봉을 인출했다” 공식 확인
12. 27	IAEA 사찰단원 3명 추방 통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에 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핵 성명 발표
12. 29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정책 도입 (정치·경제제재) 파월 국무장관, 북 약 2개(a couple) 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온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
12. 29	북, NPT 탈퇴 가능성 시사
12. 31	IAEA 사찰단 3명 북의 추방 통보 (12. 16) 에 따라 철수 부시,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2003. 1. 6 ~ 7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회의, 북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일 시	내 용
1. 6	IAEA 특별이사회 (빈),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해명 및 핵동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 10	유엔 대표부 한성렬 등 북 외교관 뉴멕시코 빌 리처드슨 (Bill Richardson) 주지사와 면담 중,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용의 피력
1. 10	<p>북, NPT 탈퇴 선언</p> <p>조선중앙방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 “북한의 NPT 탈퇴 철회해야” • 미-중: 부시 대통령-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긴급 전화 통화 “심각한 우려” • 일-러: 정상회담서 “북한 NPT 탈퇴 철회 촉구” 공동성명 • 미-북: 한성렬 주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비공식 접촉 (1. 11)
1. 11	최진수 주중 북 대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
1. 12	북 노동신문 사설, 어떠한 경제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 경고
1. 13	<p>노무현 당선자, 제임스 켈리 면담</p> <p>북핵 불인정·평화적 해결·한국 주도의 3원칙 제시</p>
1. 14	<p>부시 미 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에 경제 지원 표명하며 다자간 협상 제의</p> <p>파월 미 국무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중 기존의 협상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New Arrangement)’도 가능 언급</p> <p>북, 기만적 대화 유포 중단 촉구</p>

일 시	내 용
1. 17	미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안보 보장을 교환하는 포괄적 협약(comprehensive pact)도 가능 언급. 또한 불가침 조약 체결은 비현실적이며, 평화적 의도에 대한 서면 보증이나 서한은 가능 표명
1. 25	북, 미북 직접회담 촉구
1. 27 ~ 29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북핵 논의, 김대중 대통령 친서 전달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 핵무기 개발 포기 및 핵동결 원상복귀 선언 요구
1. 28	부시,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3개 국가는 무법 정권 (Outlaw Regime)”,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않겠다” 언급
2. 4	미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청문회’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북핵 증언 중, 다자간 협의의 틀 안에서 직접 일대일 대화 가능 언급 파장)
2. 5	북 외무성, 동결되었던 핵 시설들 가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 공표
2. 6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 침공의사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 북 외무성 부국장 리병갑, 미군 증파 결정은 북의 선제공격 불러올 수도
2. 7	부시 대통령, 북에 군사적 행동도 고려 (동시에 평화 해결 노력 지속)
2. 7	한-미, 북핵 전담기구 신설 (워싱턴)

일 시	내 용
2. 12	IAEA 특별이사회, 유엔 안보리에 북핵 문제 공식 회부 결의 러시아·쿠바: 기권 / 중국: 찬성
2. 12	미 상원 청문회 중 미 조지 테넷(George Tenet) 국장, 북 이미 알래스카, 하와이 및 미 서부 해안을 강타할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언급
2. 15	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북의 미사일 공격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시 북을 공격할 권리가 있음 언급
2. 19	노무현 당선자,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반대 언급
2. 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평화공영정책 제시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2. 25	북, 지대함 미사일 발사 (함경남도)
2. 26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 28	뉴욕타임스, 미 국방부 관리 인용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3월 중	중, 북한행 오일 파이프라인 3일간 단절 (최근 소식은 3월 10일 북의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 발사 실험 후 3일간으로 전언)
3. 1	미 국방성 12대의 B-52와 12대의 B-1 폭격기 함에 증파 결정
3. 2	북 미그기 4대, 미 정찰기(RC-135)에 15m 접근 위협 • 미: 도발 간주, 공식 항의

일 시	내 용
3. 3	부시 대통령, 미 일간지(Baltimore Sun)와의 회견 중,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 언급
3. 5	럼스펠드 국방장관, 주한 미군 북 장거리포 사정권 밖으로 재배치
3. 8 ~ 9	중, 첸지첸(錢其琛) 부총리 방북해 3자(미, 북, 중) 회담 개최 제의
3. 10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2차 시험 발사
3. 12	켈리 국무차관보 미 상원 청문회 중, 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몇 년이 아닌 몇 개월 안에 현실화될 수 있음을 언급
3. 19	이라크 전쟁 발발
3. 25	중 외교부 대변인, UN 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중국 주재 하 미북 당사국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
3. 31	미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특사와 면담 중 한성렬 유엔 주재 북 대표부 차석 대사 플루토늄 재처리과정 이미 개시됨 언급
4. 10	북의 NPT 탈퇴 발효
4. 12	북 외무성 대변인,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다자회담 수용 시사)
4. 12	카이로서 북한을 행선지로 선적된 약 22톤의 알루미늄 튜브 압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요)

일 시	내 용
4. 16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북한의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그리고 엄중한(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 위반과 북한 시민에 대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 처우(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에 대한 비난 결의안 채택. 한국 기권.
4. 13	부시 대통령, 북의 다자간 대화 수용에 "북한에서 좋은 진전"
4. 18	북 외무성 대변인, "8천여 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 마지막 단계까지 성과적으로 진행" 주장하며,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해야 하나 대북적대정책 포기 시에는 "대화 형식에 구애 받지 않을 것" 언급
4. 23 ~ 25	미-북-중, 북핵 3자회담 개최 (베이징) 북, 일괄타결 제의
4. 30	미, 북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상 7개국
5. 5	뉴욕 타임스, 미 대북정책의 초점이 핵무기 생산 금지에서 '수출 금지'로 전환 중이라 보도 미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 대변인,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거"
5. 12	북 중앙통신사 상보(詳報), 미국이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 비난
5. 14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공동성명에서 "북핵은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검토"

일 시	내 용
5. 17	럼스펠드 국방장관, 미군 감축 가능성 언급
5. 19 ~ 23	북 제5차 남북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중, 한국에 '재앙' 협박
5. 23	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기 고조 때는 강경조치(tougher measures), 북핵 회담에 한·일 참여”
5. 24	북 외무성 담화, 먼저 북·미간 회담 후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음을 피력
5. 27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의 양자회담 제의 거부
5. 31	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선언 (폴란드)
6. 1 ~ 2	G8 정상들 북에 투명하고(visibl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으로 북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폐기되어야(dismantle) 함을 강력히 촉구 (Evian-les-Bains, France)
6. 4	미 볼튼 차관, 북이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반복 불가능한 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으로 핵무기 개발을 종료할 경우 북 측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능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피력
6. 12	PSI 참여 11개국 마드리스서 첫 번째 회의
6. 12 ~ 13	한·미·일 대북정책그룹(TCOG) 회의 (하와이)
6. 17	미, 대북 식량 지원 유보
6. 18	북 외무성 대변인(조선신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
6. 30	북,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언급

일 시	내 용
7. 1	뉴욕 타임스, 미 CIA 아시아 동맹국에 미 정찰위성 북 영덕동에 핵탄두 미사일 탑재 기술 개발 단지 탐지 통고 보도
7. 3	유엔 안보리 ‘북핵 폐기 촉구’ 의장성명, 중·러의 반대로 무산
7. 12 ~ 15	다이빙귀(戴秉國)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다자회담 설득, 북 수용 불가)
7. 14	KEDO 이사국 실무자 회의 (뉴욕)
7. 21	미 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7. 23 ~ 25	북,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미·일·중·러 통보
7. 28 ~ 8. 1	볼튼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문제 협의 위해 방중·방한해 북핵 대응 3 궤도(다자간 회담, 유엔 안보리, PSI) 구상 언급(29일)
8. 1	조선신보,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인용해 북 6자회담 참가 용의 보도
8. 4	북 외무성, 6자회담 개최 발표 (6자회담 틀내 조미 쌍무회담 제안)
8. 7 ~ 8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 방북, 6자회담 일정 합의
8. 12	한-북-러, 6자회담 관련 고위급회담 (모스크바)
8. 13 ~ 14	6자회담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워싱턴)
8. 18	미 CIA, 두 개의 단순 핵탄두 이미 생산 진술 (2003. 11. 9 NYT 보도)
8. 27 ~ 29	제 1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북, 미국의 외교 관계 인정 및 안전 보장, 사찰 전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하며 핵실험 협박

일 시	내 용
8. 29	미 국무부, 북핵의 CVID식 해결 촉구
8. 30	조선신보 익명의 북 외무성 대변인 인용, 이런 종류(6자) 회담에는 관심이 없으며, 핵 억지력 강화가 자위력 향상의 유일한 길
9. 1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main obstacle)” 주장
9. 3	북 최고인민회의의 핵 억지력 유지 강화 관련 법안들 추진
9. 5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 핵 폐기 의지 보일 땐 안전 보장 방안을 검토하겠다”
9. 15 ~ 19	제47차 IAEA 총회(오스트리아 빈)서 한국을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 북에 핵무기 개발 노력 철폐 촉구 결의안
9. 30	한·미·일 북핵 관련 비공식 회의 (도쿄)
10. 2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미 적대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 핵 억지력 강화 노력”
10. 7	북 외무성 대변인(조선중앙통신 보도), 일본의 납치자 문제제기를 이유로 핵문제 회담에서 일본 제외 주장 보도
10. 10	파월 국무장관, 대북 안전보장 다자간 공개 문서화 언급
10. 16	북 외무성 대변인(조선중앙통신 보도), 핵 억지력을 물리적으로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 주장
10. 17	미일 정상, 비공개 회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 강구
10. 20	방콕 APEC 정상회담서 한미 정상 (노무현-부시), 북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대가로 다자간 안전보장을 북에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 환담

일 시	내 용
10. 29 ~ 31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본의 포함한'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 조선중앙통신, 북은 동시 행동의 원칙 하에서만 6자회담 참가할 것 보도
10. 30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동시성(simultaneity)'은 국무부서 사용치 않아온 용어라며 안전보장 이전 핵무기 프로그램의 先폐기 거듭 주장
11. 3 ~ 4	KEDO 집행이사국 비공식 집행이사회 (뉴욕),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 종료가 아닌 경수로 공사 1년 정도 중단" 결정
11. 6	부시 미 대통령, 북 압제의 전초기지
11. 6	리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 중 북 이미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 보유 주장
11. 9	다이빙귀 중 외교부 상무 부부장 방한
11. 19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2차 6자회담 협의차 방한
11. 21	KEDO, 경수로 한시 공사 중단 공식 발표 (뉴욕)
11. 29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계속 납치자 문제를 거론할 경우 회담 참여가 배제될 수 있을 것 거듭 경고
12. 8	뉴욕 타임스, 한·미·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대한 시간표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북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시설을 해체할 경우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일련의 '조율된 조치(coordinated steps)'를 요구하는 공동 제안을 기안했다고 보도, 중은 경제 지원 항목 결여를 이유로 거부
12. 9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조지 부시 미대통령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 북의 핵동결·대북 지원 행동 동시 조치 제안 거부

일 시	내 용
12. 9	북 외무성 대변인, 2차 6자회담 기본입장 발표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 재차 주장
12. 12	부시 행정부, 북핵 프로그램의 되돌릴 수 없는 철폐 요구 및 검증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다음 차 6자회담 개최 원칙 제안을 거부
12. 14	중 신화통신,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 중 중 외무상 리자오싱(李肇星) 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 미국 측에 주문 보도
12. 19	후쿠다 일 관방장관, 북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발표
12. 19	리비아, WMD 완전폐기 선언
12. 24	미 국무부, 북에 식량 6만톤 추가 지원 결정 발표
12. 25 ~ 27	왕리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결과를 보고하며 북이 2004년 6자회담 복귀 의사 피력 전언
2004. 1. 5	중-러, 북핵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 재개 촉구 공동 제안
1. 6 ~ 9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 Los Alamos National Lab) 핵물리학 과학자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 프리처드(Jack Prichard) 전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가 인솔하는 두 비공식 대표단 영변 핵시설 방문
	후일 의회 증언에서 양자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밀봉 저장되었던 8,000개의 연료봉이 저장소에서 사라진 사실과 태천에 건설 중이었던 50MWe 원자로의 황폐화 상황 목격 증언. 또한, 북측의 핵 억제력 보유 증거를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적인 증거를 보지는 못했으며, 북 외무성 차관이 UEP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피력했다는 사실을 증언

일 시	내 용
1. 8	조셀 디트라니(Joseph DeTrani) 미 신임 북한 특사,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와 면담중 6자회담 재개 필요성 강조
1. 13 ~ 17	일 외무성 관리들 납치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
1. 17 ~ 20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기 6자회담 개최 동의, 미국의 입장확인 필요”
1. 21 ~ 22	한·미·일 3자 정책 협의회, 2차 6자회담 전략 조율
1. 23	미북 뉴욕접촉 (박길연-디트라니), 2월초 6자회담 개최, 회담시 미-북 직접협상 참가 용의
1. 29	아미티지 미 국무차관 방중, 북핵 위기 논의 언론 회견 중, 미국은 6자회담 조직에 노력하는 중국에 극히 감사 (extraordinarily grateful)한다고 발언
1. 29	일 중의원, 북한 경제 제재 항목을 추가한 외환관리법 개정안 통과 (2. 9 참의원 통과) 북, 6자회담서 일본 제외 요구
2. 2 ~ 3	아미티지 미 국무차관 방일 중 납치자 유가족과 면담에서 다음 회담서 납치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표명
2. 3	북, 6자회담 참가 발표
2. 4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80~90년대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 유출” 밝힘.
2. 5	반기문 한 외무장관, 평양이 핵동결 및 검증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및 기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
2. 7 ~ 10	김계관 방중, ‘행동 대 행동’ 원칙 재천명

일 시	내 용
2. 11	한승주 한 주미대사, UEP 프로그램 문제는 6자회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
2. 17	이수혁 한 외무차관 방일 중 중은 북의 UEP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듯하다고 언명
2. 17	볼튼 미 국무차관보 방중, 대가가 주어지기 전 핵 시설 폐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
2. 24	제2차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 (베이징)
2. 25 ~ 28	제2차 6자회담 (베이징)
2. 25 ~ 28	의장성명서 채택 (28일), 핵문제의 CVID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 동의 표명 (북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3단계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북이 완전 핵 폐기의 초기 단계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완료한다면 에너지 지원에 나설 것 제안 • 북: UEP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된 파키스탄과의 연루 의혹 부인
3. 1	국제마약통제전략 연례 보고서, 미 국무부는 북한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
3. 23 ~ 25	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방북
4. 7 ~ 8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정책 협의회 (샌프란시스코) CVID원칙 재확인
4. 15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4. 19 ~ 21	김정일, 극비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핵개발 포기·보상, 신의주 특구 등 협의, 19일) • 장쩌민 주석,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 연쇄 회담 (6자회담 계속 참여, 20일) • 중 외무성, 이견 차 존재 시인

일 시	내 용
4. 22	용천 열차 폭발 사고
4. 29	북 외무성(조선중앙통신), 북은 핵동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
5. 12	한성렬 북 유엔 대표부 부대표 USA Today와 회견 중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킨 모든 국가가 평화조약에 서명할 때까지 북한은 핵 억지력을 보유할 것 언명
5. 12 ~ 15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5. 20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5. 22	북일 2차 정상회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 재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이즈미 총리 5명의 납치자 자녀와 일본 귀환 ② 일본 측이 주장하는 5명의 납치자의 안위에 대한 재조사 약속 ③ 일측은 제재 조치를 유예하는 한편,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약속 ④ 고이즈미 총리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 유예 재다짐 및 미와의 직접 대화 희망 피력 또한 핵동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이며 핵동결에 대한 검증 수용 의사도 언명
5. 24	뉴욕타임스, IAEA 사찰관들은 약 2톤에 가까운 원자탄 제조에 필수적인 헥사플로오르화 우라늄(uranium hexafluoride)을 북한이 사들인 증거를 포착했다고 보도
6. 8	주원종 중 외교부 부부장 뉴욕타임스와의 회견 중, 중국은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해 아는 바 없으며, 미국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 피력
6. 21 ~ 22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베이징)

일 시	내 용
6. 23 ~ 26	<p>제3차 6자회담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국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 동의 미: 미국의 안정보장과 한중일 3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지원의 대가로, 3개월간의 전면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후속으로 완전한 핵 철폐를 요구 북: 동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들(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경제제재 철폐, 에너지 지원 개시 등)을 요구
7. 2	<p>폴린 파월 미 국무장관-백남순 북 외무상, 미북 외무장관 회담 (ARF 참석차, 자카르타)</p>
7. 9	<p>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특사 자격 방한해 “북 핵 폐기 시 놀랄 만한 대가 있을 것” (리비아식 제안)</p>
7. 21	<p>미 하원, 북한 인권법안 승인 (H.R. 4011,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p>
7. 24	<p>북 외무성 대변인,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기극이다” 일축</p>
8. 7 ~ 8	<p>북, 미일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합동해상훈련 맹비난</p>
8. 10	<p>뉴욕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주최로 개최된 북핵 회담의 비공개 세션에서, 미 디트라니 대북 특사, 리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 라이스(Mitchell Reiss) 미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 한 한승주 주미 대사 회동</p>
8. 23	<p>북 외무성 대변인(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노골적으로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6자회담 실무회담을 열수 없다는 주장 보도</p>
9. 9	<p>북한 동북 지역에서 거대한 버섯 구름(cloud) 포착</p>

일 시	내 용
9. 9 ~ 10	한·미·일 3자 협의 (도쿄)
9. 10 ~ 13	이장춘 중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9. 11	북 외무성 대변인,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 관련 6자회담 연계 시사
9. 18	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 없음 ② 핵 투명성 유지와 국제 협력 강화 ③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 ④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
9. 20 ~ 24	IAEA 총회, 북의 NPT 복귀 및 6자회담 참가 촉구 결의안 채택
9. 23	노동신문, 미국이 핵전쟁을 개시하면 주일 미 기지들이 도화선이 되어 전 일본 지역이 핵 화염의 바다에 휩싸이게 될 것 경고
9. 27	북 외무성 최수현 부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주장
9. 28	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9. 30	파월 미 국무장관-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북핵 6자회담 조속한 개최 합의 (워싱턴)
10. 5	북 외무성 대변인, 인권법안 통과는 전쟁선포 행위
10. 18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안 서명
10. 18 ~ 20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원장 방중

일 시	내 용
10. 22	북 외무성 대변인,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거한 일괄타결 방안의 첫 단계로서 ‘동결 대 보상’의 시행이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6자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11. 12	노무현 대통령 LA World Affairs Council 연설 중, 북에 대한 강경 정책은 엄중한 결과 초래 경고
11. 26	KEDO, 집행이사회 개최해 북한 경수로 건설 중단 1년 연장 결정 (뉴욕)
12. 5	노무현 대통령, 한·중과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이견으로 인해 북핵문제 풀기 어렵다고 발언 (프랑스 파리 교민 간담회)
12. 13	켈리 미 국무 차관보 인터뷰 중, 북한이 모든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현행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계를 다자간 평화조약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언명
12. 17 ~ 18	한일 정상회담서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에 대북제재 조치 결정 유예 권고
2005. 1. 8 ~ 11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톰 란토스(Thomas Lantos) 하원의원 일행 방북
1. 11 ~ 14	미 하원의원 대표단 방북 커트 웰던(Curt Weldon) 등 공화·민주당 의원 6명, 6자회담 재개 시사
1. 18 ~ 19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서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
1. 20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 강조
2. 10	‘핵무기 보유’ 선언 (외무성 성명)

일 시	내 용
2. 10	①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②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 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에 급파, 딕 체니(Richard Brace Cheney) 미 부통령과 협의 • 미: “북한 고립 심화될 뿐” • 북: 주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 “북·미 직접 대화해야” • 중: “북핵 관련 대북한 압력·제재 반대 입장” • 일: “새로운 것 아니다” • 미-중: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전화 통화로 북핵 의견 교환 (12일) • 한-중: 반 장관-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 3대 정책 합의 (14일) ① 북 회담 복귀 압박, ② 대북한 추가 보상 금지, ③ 북 핵물질 반출 경계
2. 19 ~ 22	왕자루이(王家瑞)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6자회담 조건되면 회담 탁(卓)에 나갈 것”
2. 19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공동 기자회견 “북핵 해결 안되면 유엔 안보리에 상정”
3. 2	북 외무성, 조건 충족 시 6자회담 참가 메모랜덤 공개
3. 2 ~ 4	우다웨이(武大偉)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3. 16	북 외무성, 라이스 장관의 폭정 발언 맹비난
3. 18 ~ 21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북을 ‘주권국가’로 지칭
	방일(3. 18~19), 방한(3. 19~20), 방중(3. 20~21)

일 시	내 용
3. 22 ~ 27	박봉주 정무원 총리 방중, 회담 중지도 투쟁이지만 회담 참가도 투쟁이라며 우회적으로 대화 참가 의지 피력
3. 31	북 외무성,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균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4. 23 ~ 29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한·중·일 방문 북핵 문제 협의
4. 25	북 외무부, UN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 엄포 북 강석주 외무성 부상 방중, 6자회담 전 미북 양자 협상 강조
4. 29	부시 대통령, 김정일에 폭군(tyrant) 지칭 북: “부시는 불망나니에 도덕적 미숙야” (30일)
5. 6	한-일, 한-중 연쇄 북핵 회담, “6자회담 외교노력 계속”
5. 8	한중 정상회담 “북한 핵에 깊은 우려”
5. 9	한러 정상회담 “6자회담 위해 더 노력”
5. 9	미러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
5. 11	북 외무성,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작업 완료” 남: “폐연료봉 인출은 협상용”
5. 13	미북 뉴욕 실무접촉 미, 북은 주권국가이며 침공의사 없음 재확인하며, 6자회담 재개 시 양자 협의도 수용 가능 피력
6. 8	ABC 뉴스, 북 외무성 차관 김계관의 “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충분한 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언급 보도
5. 13	미-북, 뉴욕 실무접촉,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 시사

일 시	내 용
6. 10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핵무기 완전 제거가 공동 목표”
6. 14 ~ 17	<p>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장관: 200만KW 전력공급 제의 (7. 12 발표) • 김 위원장: “미국에서 북한 인정·존중 확고할 경우 내달 6자회담 복귀 용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 • 미: “날짜 정하기 전까지 6자회담은 없는 셈”
6. 18	북,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6. 29	<p>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로 북한 기업의 미국 내 활동·자산 동결”</p> <p>북한 3개 회사(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미국 내 자산 동결</p>
7. 9	김계관 -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접촉 (베이징), “7월 25일경 제 4차 6자회담 개최 미국과 합의” 발표
7. 9 ~ 13	<p>라이스 미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p> <p>중(9~10일), 일(11~12일), 한(12~13일)</p> <p>방한 중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력 지원, 6자회담에 큰 도움”</p>
7. 12	<p>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 중대 제안 발표</p> <p>“북한 핵 폐기할 때는 2008년부터 200만KW 전력 직접 공급” “핵 폐기 2년 내 이뤄져야” (14일)</p>
7. 13	김정일 위원장,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면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이 노력할 것”
7. 14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4차 6자회담 실무협의 (서울), ‘대북한 송진’ 6자회담서 추진

일 시	내 용
7. 22	북 외무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피력
7. 26 ~ 8. 7	1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8. 11	정동영 장관, “평화적 핵 이용은 북한의 권리”
8. 13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대부분 압둘 칸 박사가 1990년대 초 북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및 설계도 보낸 사실 공개
8. 13 ~ 15	테드 터너(Ted Turner) CNN 사장 방북
8. 14 ~ 18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y) 러 극동대표부 대표 방북
8. 15 ~ 18	칼 레빈(Carl Levin) 미 상원의원(민주당) 일행 방북
8. 25 ~ 26	추이텐카이(崔天凱) 중 외교부 부부장 방한
8. 23	반기문 장관-라이스 국무장관, 한미 외교장관회담 통해 북 핵무기 완전 폐기 원칙 재확인
8. 26	북, WFP 등 국제기구에 북에 대한 인도적 원조 중단 요청
8. 29	북 외무성, 9월 셋째 주에 6자회담 2단계 회담 갖자 발표
8. 30 ~ 9. 3	미 하원의원 란토스(Tom Lantos, 민주당)·리치(Jim Leach, 공화당) 방북, 북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김계관 부상, 경수로 제공 강조
9. 12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anco Delta Asia)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일 시	내 용
9. 13 ~ 19	2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 미: “핵 프로그램 폐기” • 북: “핵 무기만 포기”
9. 13	부시 미 대통령-후진타오 중 국가주석, 유엔 총회 참석차 정상회담 (뉴욕) • 중: “북한 핵무기 포기 계속 설득” • 미: “6자회담 통해 외교적 해결”
9. 16	미 재무부,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匯業銀行)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 돈세탁 등을 도와준 혐의가 있다고 발표
9. 19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 • 9·19 공동성명 요약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 NPT·IAEA 안전조치 복귀,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9. 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 9. 19, 베이징) ①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 시	내 용
9. 19	<p>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p> <p>②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p> <p>③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 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p> <p>④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p> <p>⑤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p> <p>⑥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p>
9. 20	<p>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 기관으로 공시 (BDA는 북과 거래 중단 발표)</p>
9. 30	<p>한, “북한, 핵 상호 사찰 요구 땀 수용” 밝힘.</p>
10. 6	<p>힐 차관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핵 청문회서 “북한에 경수로 관련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발표</p>

일 시	내 용
10. 17 ~ 20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 북은 영변 핵시설 공개
10. 18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BDA 금융제재는 우회적 압박 수단이며, 미국이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
10. 18	리빈(李濱) 중 북핵대사 방북, 5차 6자회담 개최 합의 도출
10. 21	미, 해성무역·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 등 북 8개 기업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입 의혹으로 자산 동결
10. 24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 책임을 따지고 계산키 위해 11월 초 5차 6자회담에 복귀할 것 언급
11. 6	부시 대통령, 김정일은 폭군
11. 9 ~ 11	<p>1단계 제5차 6자회담 (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 • 북: 미국의 마카오 은행에 대한 대북거래 금지 조치 반발 (10일) • 미-북, ‘금융제재’ 양자 협의 갖기로 합의
11. 17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11. 21 ~ 22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종료방안 논의 (뉴욕)
12. 2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금융제재 해제는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필수조건 주장
12. 7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대사, 북을 ‘범죄국가(Criminal Regime)’로 지칭
12. 10	북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불법활동 자료는 날조된 것,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힘.

일 시	내 용
12. 20	북 중앙방송, 경수로 제공의 증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북)는 흑연감속로들과 그 연관시설들에 기초한 핵 동력 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 주장
12. 20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달리 위조는 분명한 사실”
12. 29	한, NSC 개최해 미국요청 PSI 관련 요청 8개 사항 중 ① 역내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 파견, ② PSI에 관한 포괄적 구체적 브리핑 청취, ③ 한미 군사훈련에 WMD 거래 차단 훈련 포함 등의 항목에 사안별로 협조할 것 결정
12. 31	북 평양방송,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범죄국가”
2006. 1. 5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 위조지폐 대응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
1. 8	KEDO 현장 인력 전원 철수
1. 9	북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 해제 재요구
1. 10 ~ 18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 방중
1. 16 ~ 25	미 재무부 대표단 아시아 순방, 금융제재 당위성 설명 및 협조 당부 마카오·홍콩(18~20), 한국(21~23), 일본(24~25)
1. 18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에서 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선 금융제재 해제 요구 • 미: 기존 입장 고수
1. 25	노무현 대통령, 미 대북 압박 및 체제 붕괴 노력 지속 시 한미간 이견 발생 주장
1. 31	부시 미 대통령 국정 연설, 폭정 종식 및 북한과 이란에 평화와 정의 수립을 위한 자유 확산 강조

일 시	내 용
2. 2	미 존 네그로폰테(John D. Negroponte) CIA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 듯(probably true)하다”고 증언
2. 4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베이징)
2. 16	방코텔타아시아 은행, 대북거래 중단 선언
2. 28	백남순 북 외무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 주장
3. 7	미-북, 위폐 및 불법금융 거래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 제안 •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거부
3. 18 ~ 19	북,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3기 발사
3. 20	노동신문, 부시는 정신착락증 환자 언급
3. 30	미, 스위스 코하스 AG(Kohas AG) 미국 내 자산 동결 (북 대량살상무기 지원 혐의)
5. 24 ~ 26	힐 차관보, 방중(24~25), 방한(25~26)
5. 31	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발표문서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 책임”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 종결,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 투입
6. 1	북 외무성, 적대 정책 지속 시 초강경 대응 불가피 힐 차관보 초청 (7일, 미국 거부)

일 시	내 용
6. 18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6. 19	라이스 미 국무장관, 대북 미사일 모라토리엄 준수 촉구
6. 21	조선신보, 북 미사일 주권 보유 주장
6. 22	체니 미 부통령, “북한 미사일 외교적 해결”
6. 26 ~ 2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북 미사일 문제 협의 위해 방중 리자오싱 중 외교부장,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중국의 관심 북한에 전달”
6. 29	짐 리치(James A. Leach)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북한 청문회에서 북이 최대 13개의 핵무기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6. 29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조지 부시 미 대통령 정상회담, 북 위협 공동 대응
7. 5	북, 미사일 발사 실험 (미 독립기념일, 미 현지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 6발 발사, 12시간 후 1발 추가 발사/대포동 2호 7분간 비행 후 공중폭발 • 북: “자위적 국방력 강화차원의 군사훈련으로 6자회담과는 무관” • 한: “대북 강경론 입지 강화, 남북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미: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 일: “도발 행위, 평양 선언 위배”, 북 화물선 (만경봉92호) 입항 금지
7. 6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미사일 외교적 해결” 전화 통화

일 시	내 용
7. 6	북 외무성 대변인,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군사훈련의 일환”,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북)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7. 7	힐 차관보, 한·중·일·러 4개국 긴급 순방
7. 7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마카오 자금동결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
7. 10 ~ 15	우다웨이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김정일 면담 무산)
7. 11 ~ 13	힐 차관보 방중
7. 15	<p>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Resolution 1695) 만장일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한에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발사유예선언 등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 ② 모든 회원국에 미사일과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이 북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것 요구 ③ 이와 관련 북에 각종 재정 자원을 북에 제공하지 말 것 요구 ④ 북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결정
7. 17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회동 (워싱턴), 5자회담 개최 추진 합의
7. 19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쌀·비료지원 중단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8·15 화상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등 모든 남북 사업 중단 선언

일 시	내 용
7. 21	노무현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 참여 안해
7. 25	미 하원,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통과 (9. 30 상원 통과):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보유 관련 물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북에 이전하거나 북으로부터 구입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을 미 대통령에 부여
7. 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6자회담 참가 5개국 (한·미·일·중·러)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8.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8. 10	부시 미 대통령, 북은 도둑정치(Kleptocracy)의 정수를 보여 줌 주장
8. 12	힐 차관보, 북 핵실험 가능성 언급
8. 17	ABC 방송, 북 장비 이동으로 지하 핵실험 의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 없어 • 미: 북이 핵실험 한다면 주변 국가에 위협을 일깨워 주는 것
8. 21	부시 대통령-후진타오 국가주석, 전화 통화 중 북 핵실험 중단 촉구
8. 26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 확대를 통한 압력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강구해 나갈 것"
9. 9	세계 24개 금융 기관 대북거래 중단 (중 포함)
9. 13	미, 유엔 전 회원국에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 동참 공문

일 시	내 용
9. 14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 합의
9. 1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없다”
9. 19	일본·호주,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표
9. 21	버시바우 대사,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고려”
9. 25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20여기 북한에 제공”
9. 26	라이스 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 아시아 순방”
9. 26	최수현 북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9. 29	천영우-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핵 ‘포괄적 접근 방안’ 협의 (서울)
10. 3	북, 핵실험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외무성, “미국 제재 압력에 자위적 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 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 한: 여·야, 핵실험 중단 촉구 • 미: 북 핵실험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 일: 북 핵실험 용서 못해
10. 6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서 채택, 북 핵실험 계획 발표에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일 시	내 용
10. 8	<p>중일 정상회담 (베이징)</p> <hr/> <p>6자회담 재개 추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다짐</p>
10. 9	<p>1차 지하 핵실험 (풍계리)</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시 35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진도 3.58에서 3.7의 지진파 포착 • 북 조선중앙통신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한: “핵실험은 불안한,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 미: ①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 ②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 ③ 미국은 유엔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유엔에서의 논의를 지지 (부시 대통령) • 중: 북이 제멋대로 핵실험
10. 9	<p>한일 정상회담 (서울), 북핵 실험에 공동 대응</p>
10. 10	<p>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전두환, 김영삼, 김대중)과 북핵 실험 관련 오찬 간담회</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햇볕 정책은 성과, 북미간 대화가 해법 • 김영삼: 햇볕 정책 폐기
10. 10	<p>버시바우 대사,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해야”</p>
10. 11	<p>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우리(북)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 우방·미국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 강구할 것 •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 어렵고, 북미 대화도 당장은 힘든 상황 • 일 정부: 북 선박 입항 금지, 전 품목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경제제재 결정 (13일)

일 시	내 용
10. 11 ~ 19	탕자쉬안(唐家璇) 중 외교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11~12)·방러(13~15)·방북(18~19)
10. 11 ~ 19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만나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의견 차이 조율 (13일) 김정일 위원장, ‘금융제재 해결 보장시 6자회담 복귀’ (19일)
10. 13	노무현 대통령, 중국 실무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3개항 요구조건 제시
10. 13	조지 부시 미대통령,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서명 (WMD 관련 물자나 기술 거래 제재 가능)
10. 14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선출
10. 14	<p>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Resolution 1718) 만장일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 (최초) • 주요 내용: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동결 및 금융 중단, 무기 제조 관련자 여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이행 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 • 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과 무관”
10. 16	<p>미, 지하 핵실험 공식 확인</p> <p>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 탐지, 핵 폭발력은 1kt 미만”</p>
10. 17	북 외무부 대변인 성명, “누구든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내두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
10. 17	라이스 장관, 일·한·중 순방

일 시	내 용
10. 17	미하일 프라드코프(Mikhail Yefimouich Fradkov) 러시아 총리 방한
10. 18	한,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금강산 관광객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10. 18 ~ 22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18~19)·한(19~20)·중(20~21)·러 (21~22) 순방, 각국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10. 18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10. 18	아소 다로 일 외상,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핵 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
10. 19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서울, 라이스 순방 중)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것” 라이스 장관, 노무현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촉구
10. 19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가동
10. 20	중, “북한 2차 핵실험 징후 없다” • 한: 북한 의도 분명치 않아, 예의 주시 • 미: 특별히 놀라운 것 없다 • 일: 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할 계획 없다
10. 20	아소 다로 외상-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회담, 노무현 대통령 예방
10. 20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 행사 (평양)
10. 20	제38차 한미 SCM(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을 통해 확장된 억제 (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

일 시	내 용
10. 22	홍콩,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 화물선 ‘강남 1호’ 억류
10. 22	북 노동신문,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고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10. 24	중 외교부, “김정일은 현재 2차 핵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없지만 외부로부터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25	한 과학기술부, “북의 핵실험 공식 확인”, 강원도 간성 휴전선 일대서 제논(Xenon, 크세논) 검출
10. 25	북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것”
10. 25	라이스 장관, “북 6자회담 복귀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유지하기로 한·미·일·중·러 5개국과 합의”
10. 2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 무기부터 사치품까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은 거론 안됨. 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 되는 북 인사 국내 입국 불허
10. 26	홍콩에서 북 화물선 강남 5호 억류
10. 30	힐 차관보, 호주 방문 일정 줄이고 중국행
10. 31	미-북-중, 3자 회동 (북경)에서 6자회담 개최에 합의 힐, 우다웨이, 김계관 비공식 회담 통해 합의 라이스 장관, “6자회담 재개시 5MWe 원자로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IAEA 사찰단 활동 등 요구할 것”
11.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호 결의의 이행사항 중 첫 단계로 북 금수대상 품목 확정

일 시	내 용
11. 1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朝美)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
11. 4	북 외무성 대변인,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더 없이 좋은 일”
11. 13	한, PSI 정식 참여 유보
11. 1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하노이)서 조속한 진전(early progress) 방안 마련
11. 18	한,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첫 찬성표
11. 18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하노이, APEC), “북핵 폐기 압박·유인책 병행”
11. 18	한미 정상회담 (하노이) 미 백악관, “북 핵 프로그램 철폐·핵 야망 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
11. 18 ~ 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정상회의(하노이)서 북 핵포기와 6자회담 조기 개최 촉구하는 의장 특별 성명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선언인 ‘하노이 정상선언’에는 미포함
11. 20	부시 대통령, 북 핵 포기시 종전선언 언급
11. 20 ~ 21	힐 차관보-우다웨이 부부장 회동
11. 27	한·미·중·일 4개국 6자회담 대표 연쇄 접촉서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 (베이징)
11. 28 ~ 29	미·북 수석대표 회담, 점점 못 찾음 미, 북에 조기 성과(Early Harvest) 제의

일 시	내 용
11. 30	미,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개 확정
12. 1	북 김계관,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12. 18 ~ 22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미: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 •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 일북 평양선언 및 공동성명을 위반한 행위 • 북: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제재 해제가 선결 • 중: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기대 • 러: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
12. 19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미대사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해결
12. 20	미-북, BDA 실무회의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12. 21	노무현 대통령, 9·19 공동성명 2~3일 전 BDA 계좌 동결은 짜고 치는 고스톱 발언 파문
12. 22	제5차 2단계 6자회담 휴회
2007. 1. 16 ~ 1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BDA 문제 합의 (베를린)
1. 24	부시 대통령 국정 연설, 한·중·일·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응집된 노력을 기울일 것
1. 30 ~ 31	북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미 대니얼 글레이저(Daniel Glaser)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BDA회담 (베이징)
2. 2	미 재무부, 미국인에 의한 북한 선박 등록 및 북한 국적기 사용 금지 조치 발표

일 시	내 용
2. 8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재개
2. 12	미, 북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2. 13	<p>‘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13 합의)’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간의 단계별 핵불능화 이행(Phased Implementation)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단계 (Phase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 영변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의 중지(shutdown) 미,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 2 단계 (Phase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complete and correct) 신고 완료. 테러지원국(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종료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에 따른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탄두 해제 문제 동의 사항은 불능화 완료 및 북의 신고(Declaration)가 접수된 후인 3 단계 (Phase III) 과정에서 차후 협의 • 북한내 ①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60일 이내)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다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②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기간 중 중유 100만톤(초기 5만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 (30일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일 시	내 용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회담 개최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3. 6	미 국무부,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계획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해야”
3. 6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뉴욕)
3. 7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하노이)
3. 13 ~ 14	IAEA 사무총장 방북
3. 19	<p>힐-대니얼 글레이저(Daniel Glaser),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 (베이징)</p> <p>“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p>
3. 19 ~ 22	1단계 제6차 6자회담 개최
3. 22	BDA 자금 미입금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귀국, 우다웨이 부부장 휴회 선언
3. 25 ~ 4. 6	미 재무부 대표단, 북중과 BDA 북 계좌 동결 해제 논의
4. 8 ~ 12	<p>빌 리처드슨 주지사와 함께 빅터 차(Victor D. Ch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아시아 담당 국장 방북</p> <p>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논의,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폐기 필요성 언급</p>
4. 10	미 재무부, 마카오 당국의 BDA 동결자금 해제 지지 성명 발표

일 시	내 용
4. 10	마카오 당국,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계좌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발표
4. 13	북 외무성, BDA 문제 관련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 성명 발표
5. 15	북 외무성, BDA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실현 시 2·13 합의 실현
6. 5	부시 대통령 프라하 연설, 북은 최악의 독재국가
6. 16	이제선 북 원자력 총국장,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서한 발송
6. 21 ~ 22	힐 차관보 방북, 북 영변 원자로의 빠른 시일내 폐쇄 언급
6. 25	러 극동사업은행, BDA 자금(2,400만 달러) 북 대외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발표
6. 25	북 외무성, 북 계좌로 BDA 동결자금 송금 확인 조선중앙통신, 동결 자금 해제 과정이 진척되고 있으므로 IAEA 실무단 초청 보도
6. 26 ~ 30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7. 6	북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톤 첫 선박 입항과 맞추어 핵시설 가동 중지 준비 개시할 것
7. 14	한국 제공 중유, 선봉항 도착 (총 5만톤 중 1차분)
	북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다” (15일)
7. 18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원자로 폐쇄 공식 발표
7. 18	IAEA, 영변 5개(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시설 폐쇄 확인

일 시	내 용
7. 18 ~ 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베이징) 9월 초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장관급회의 개최
8. 2	한, 대북 중유 5만톤 공급 완료
8. 7 ~ 8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판문점)
8. 8	미 국가정보국 기밀해제 보고서, 북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데에 '높은 확신(high confidence)' 표명
8. 16 ~ 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선양) 북, 불능화 핵시설 대상에 영변 5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거론
8. 20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모스크바)
9. 1 ~ 2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제네바)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 합의
9. 6	이스라엘, 시리아 알-키바르(Al-Kibar) 핵시설 (원자로 건설 단지) 폭격
9. 11 ~ 15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9. 12	뉴욕 타임스, 북-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제기
9. 18	북 외무성,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9. 23	중, 2차분 대북 중유 5만톤 공급 완료
9. 26	미 국무부, 미사일 거래에 연루된 북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제재 조치 부과 결정 발표

일 시	내 용
9. 28 ~ 10. 3	<p>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3 합의) 합의</p>
	<p>* 2·13 합의의 2번째 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들(Second-Phase Actions)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중유 100만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p>①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p> <p>②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p> <p>③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p> <p>④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p> <p>⑤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톤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p>
	<p><2차 북핵협상 경과></p> <p>3차 회담 ('03. 4. 23~25):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p> <p>제1차 6자회담 ('03. 8. 27~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p> <p>제2차 6자회담 ('04. 2. 25~28): 의장성명 형식 합의 도출</p> <p>제3차 6자회담 ('04. 6. 23~26): '행동 대 행동' 원칙 공감</p>

일 시	내 용
9. 28 ~ 10. 3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제1단계 회의 ('05. 7. 26~8. 7) 제2단계 회의 ('05. 9. 13~19) 제5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 제1단계 회의 ('05. 11. 9~11) 제2단계 회의 ('06. 12. 18~22) ※미북 베를린 합의 ('07. 1. 16~18) 제3단계 회의 ('07. 2. 8~13)
	제6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 합의) 제1단계 회의 ('07. 3. 19~22) 수석대표 회의 ('07. 7. 17~20) 제2단계 회의 ('07. 9. 27~30)
10. 2 ~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핵문제 해결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이행 노력" 명시
10. 3	제6차 6자회담 2단계 합의 내용을 토대로 10·3 합의 발표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미북 및 북일간 관계정상화 노력, ③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선언
10. 11 ~ 18	북핵 불능화 실무팀(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외 8명) 방북 영변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시찰 및 불능화 위한 10여개항 합의
11. 1 ~ 5	미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11. 6	미 루거의원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협의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군축·비확산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1. 27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
11. 29	힐 차관보, 북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해결 필요 언급
12. 1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관련 의혹 부인, 로켓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에 설명
12. 3 ~ 5	힐 차관보 방북, 부시 미 대통령 친서 전달
12. 19 ~ 21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추진 및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관련사항 신고 문제 논의
12. 26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12. 31	북,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12. 31	북,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2008. 1. 4	북 외무성, “수입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을 참관시켰다” 주장
1. 7 ~ 8	힐 차관보, 한·중·일·러 방문
1. 29 ~ 2. 2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한(29), 방중(30), 방북(31)
1. 29 ~ 2. 2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북한에 촉구
1. 31	왕자루이(王家瑞) 중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일 시	내 용
2. 5	미 마이크 맥코넬(Mike McConnell) 국가정보국장, 상원정보위에 출석해 북의 HEU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핵확산 활동의 지속, 대포동 미사일은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 위협 주장
2. 19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베이징)
2. 20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 이란 혁명 수비대(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s)와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비밀 핵시설에 북 전문가들 출현했던 적 있음을 이란의 한 해외 저항 단체(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의 증언을 인용 보도
2. 21	김계관 부상-천영우 본부장 양자회담 (베이징)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비핵·개방·3000 구상 공식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2. 26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핵문제 협의차 방중
2. 26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평양 동평양대극장)
3. 13 ~ 14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핵 신고 논의 (제네바) 힐, “신고 형식에 유연 대처”
3. 19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타결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려워”
3. 26	김태영 합참의장,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 (북의 핵공격시 대처방법 질문) 답변

일 시	내 용
3. 28	북, 서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김 함참의장 답변 반발)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수역 남북충돌 경고 북 외무성 대변인, 기존의 핵 불능화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
4. 8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싱가포르) 미북 비공개 양해서 채택
4. 24	미 정보기관 관계자, 의회서 북-시리아 원자로 개발 협력 브리핑서 시리아 알-키바르(Al-Kibar) 원자로와 영변 원자로의 유사성을 보여 주는 사진 등 공개
5. 8 ~ 10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제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미 50만톤 식량 제공 공식 발표
6. 23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온라인), 북한-이란-시리아 핵개발 삼각 커넥션 의혹 보도
6. 26	북,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핵 신고서(Declaration)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 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6. 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발
6. 28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6. 30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 및 이를 반영한 추경예법안 통과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102(a) 조항의 개정: 핵기폭 장치의 폭발 실험을 감행한 NPT 가입국 중 비핵국가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

일 시	내 용
7. 6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 돼 있다” (일 교도통신 인터뷰)
7. 8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7. 10 ~ 12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7. 12 합의) ①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②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③ 핵 포기과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 ④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⑤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7. 11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북과 협의할 용의 밝힘.
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7. 23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싱가포르)
8. 11	미, 북이 북한 내에서의 검증 체계에 동의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8. 11 ~ 13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중국 선양)
8. 14	북, 미측이 과도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26일 발표) 성 김 미 대북특사 방중
8. 15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힐 차관보, 북핵 검증 회동 (뉴욕)
8. 18	북 조선중앙통신,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

일 시	내 용
8. 22	미-북, 북핵 검증체계 관련 회동 (뉴욕) 미, '안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제시
8. 24	베이징 올림픽 폐막 (8. 8~24)
8. 25	한중 정상회담 (서울),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 촉진
8. 26	북 외무성, '불능화 중단' 발표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고려한다고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유감스러운 조치" • 미: 데이너 페리노(Dana Perino) 백악관 대변인, 북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미충족 • 중: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9. 5	6자회담 참가국 (한·미·일·중) 수석대표 회동 (베이징)
9. 9	9·9절 행사에 김정일 불참
9. 19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협의 (판문점) 현학봉 북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
9. 22	북, 영변 핵 봉인 제거 요청 (재가동 위협)
9. 24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 "북한 전문가들이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그리고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을 돕고 있다"
9. 26	워싱턴 포스트(WP), 미국의 북핵 검증 과도해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핵 관련 목적을 가졌었던 모든 지역의 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full access to all materials) • 군사 시설을 포함,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근(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일 시	내 용
10. 1 ~ 3	힐 차관보 일행 방북 검증 방식 '구두(verbal)' 합의 (3일) * 후일 북은 현장 시료채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복
10. 7	북,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 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미북간 합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10. 12	북, 핵 불능화 작업 재개
10. 13	북, IAEA 검증단 핵시설 접근 허용 북, 핵시설 불능화 재개 (연료봉 제거)
10. 15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미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북핵 폐기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워싱턴)
10. 21	일 넷케이 신문, 에너지 지원 대신 북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에 160억 엔 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보도

일 시	내 용
10. 22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고려
11. 7	리 근 미국국장, 북핵 검증·핵불능화·에너지 지원 문제 협의 (뉴욕)
	* 미북간 샘플링 문제 협의 • 힐,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
11. 12	북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11. 15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무력화 (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
11. 18	미 식량 50만톤 중 5차분 북 남포항 도착
11. 25	미 국무부, 6자회담 틀 안에서 시료채취 명문화 노력
12. 4 ~ 5	힐-김계관, 양자회담 (싱가포르) “문서 표현에 견해차”
12. 8 ~ 11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베이징), 합의된 검증 방식 도출에 실패
12. 9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 북 핵보유국 표기 파문
	• 북: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10일) • 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 미 합동군사령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10일) • 미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12일)

일 시	내 용
12. 12	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
	러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 “동의를 적이 없다” (13일) 호주-뉴질랜드 대북중유지원 잠정 보류 (17일)
2009. 1. 13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
1. 8	미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항 도착 (총 50만톤 중 옥수수 21,000톤)
1. 15 ~ 19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방북,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 논의
1. 15	미 대북 지원식량 7차분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 등 4,940톤 선적 완료
1. 17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
	북 조평통 성명,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 발표
1. 20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 대통령 취임
2. 5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북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표현
2. 13	힐러리 미 국무부 장관,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아시아 순방 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뉴욕)

일 시	내 용
2. 19 ~ 20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 (모스크바)
2. 20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주한 미대사 임명
2. 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3. 2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에 위성락 임명
3. 9	<p>‘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다음 4항목의 경고 메시지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 ②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 ③ 당면하여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되어있는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군통신도 차단할 것임.
3. 24	북 외무성 담화,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행위는 6자회담의 존재 기초를 부정 하는 것
3. 30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역류
4. 5	<p>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p> <p>오바마 대통령, ‘핵무기 없는 세계’ 연설 중 “북한이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프라하)</p>

일 시	내 용
4. 14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적절한 조치 • 북: 6자회담 불참,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
4. 18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
4. 19	한,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4. 20	샘 브라운백(Brownback) 미 상원의원, 북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
4. 20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4. 24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4. 25	북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4. 29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계속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 연료를 자체 해결(즉, 우라늄 고농축 시사)” 할 것 경고 미, “핵실험 위협 등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5. 7 ~ 12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한·일 방문
5. 8	북 외무성 대북 적대하는 미국과는 대화 무용 입장 발표
5. 12 ~ 14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 러시아 방문
5. 25	2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PSI 전면참여 선언 • 북: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 시	내 용		
5. 27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 성명,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북남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5. 30	로버트 게이츠(Robert M.Gates) 미 국방부 장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2	미 북핵 대응 ‘범정부 대표단’ 방한		
6. 3	미 상원의원 8명,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법적 요건에 도달 못해”		
6. 12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Resolution 1874) 만장일치 채택		
	〈결의 1718과 결의 1874 비교〉		
		결의 1718 (2006.10.14)	결의 1874 (2009.6.12)
규탄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금지물품 (금수무기, WMD·미사일) 적재한 화물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처분
수출통제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모든 무기 관련물자
금융제재	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자원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일 시

내 용

6. 13 북 외무성 성명, '대미 전면대결 시작' 및 '플루토늄 무기화·우라늄농축 작업 착수·군사적 대응' 위협
-
-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
6. 19 미 재무부 대금융범죄법집행망(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 금융기관에 북 불법 금융거래 경계 조치
-
6. 26 미 백악관,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 백안관, 국가안전부, 재무부 대표들로 구성된 부처 간 협력체 구성 (책임자 Philip S. Goldberg)
-
7. 16 미 국무부, 북한의 5개 법인, 두 가지 품목, 5명의 개인을 1874 결의안의 제재 대상으로 지명
-
7. 23 힐러리 장관,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서 “우리는 절반의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언급
-
-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
 -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은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 설정
-
7. 29 중, 단동서 북으로 반입 시도하던 약 70kg의 바나듐 (Vanadium) 적발·압수

일 시	내 용
8. 6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두 여기자(Laura Ling, Euna Lee) 석방
8. 10 ~ 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개성공단 억류직원 귀환 (13일)
8. 17 ~ 19	우다웨이(武大偉) 중 외교부 부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와 다자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18일)
8. 23	북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
9. 4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 안보리 의장에 편지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9. 15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 “(북한에) 6자회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9. 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 (뉴욕),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
9. 23	이명박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

일 시	내 용
9. 25	북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해 현지에서 기증식
9. 29	박길연 북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 (현지 28일)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
9. 30	북조선 중앙통신, “남조선 고위당국자의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제안이 ‘비핵·개방·3000’의 답습으로 백해무익하다”
10. 4 ~ 6	원자바오(溫家寶) 중 총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 (5일)
10. 14	노동신문, “미북 평화협정 체결만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도”
10. 23 ~ 11. 3	리근 미국국장 방미 (뉴욕) (귀국, 현지 2일) 리근 미국국장-성 김 북핵특사 비공식 회동 (24일)
10. 29	북조선 중앙통신, 후진타오 중 주석이 김정일 방중 요청보도
10. 30	월터 샤프(Walter L. Sharp)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
11. 1	정부 고위 관계자, 작전계획 5029에서 북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
11. 2	북 외무성 대변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美·北 양자회담 개최에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
11. 2	북 외무성 대변인, (리근-성김 회동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

일 시	내 용
11. 3	북 조선중앙통신, “8,000대의 폐연료봉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
11. 4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핵 문제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 언급
11. 8	북 민주조선, 한국의 작전계획 5029 완성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며 노골적인 도발”
11. 9	자크 랑(Jack Lang) 하원의원,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 방북
11. 10	서해교전(대청해전) 발생 (NLL 침범해 한국 경비정 조준 사격한 북 경비정 반파) 북한군 최고사령부, 한국에 사죄 및 재발방지조치 요구
11. 11	미 국무부, 보즈워스 방북 발표 (현지 10일)
11. 12	노동신문·민주조선, 서해교전 “만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11. 12	일 NHK,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7~18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만나 남북 정상회담 논의
11. 13	오바마 미 대통령,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과 포괄적인 해결(Comprehensive Resolution)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in full agreement) • 6자회담이 북핵문제 평화적인 해결 위한 최선의 틀 •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우리가 성취해야할 분명한 목표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을 획득 시도는 불안정 요인으로, 평화와 안보에 위협 •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전과 존경을 향한 평화적인 길 걸을 것

일 시	내 용
11. 13	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과 협력해 일괄타결 방안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것”
11. 13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 통지문, 한국에 사과 요구 및 군사조치 위협, “값비싼 대가” 재언급
11. 19	<p>한미 정상회담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오바마 대통령,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
11. 19	클린턴 장관,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다시한번 확인한다면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 (아프간 카불 주재 미 대사관, 현지 18일)
11. 20	미 핵과학자회보,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
11. 21 ~ 24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 대표단 (프리처드 일행), 방북 후 “북한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11. 23	북 노동신문,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일 시	내 용
11. 23	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에 (평화협정과 같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
11. 24 ~ 25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 상원의장 방북, “현재로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12. 1	친강 중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북미 대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12. 2	북 조선신보, “북미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
12. 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이 중심이 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12. 3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는 9·19 공동성명, 또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안에도 포함되는 것”
12. 4	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오는 8일 평양에 도착, 북한 당국자와 만나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할 것”
12. 7	미 국무부, (평화협정은) “이번 방북의 의제가 아니며, 보즈워스 특사도 6자회담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12. 8 ~ 10	보즈워스 특별대표 일행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 등)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회동 (9일)
12. 10	보즈워스 특별대표,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 (서울 기자회견)

일 시	내 용
12. 11	북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인식을 이룩했다”
12. 11	국제핵물질위원회(IPFM) ‘2009 국제핵물질보고서’,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2차 핵실험에는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11	보즈워스 특별대표 일·중·러 순방
2009. 12. 14 ~ 17	미국 기업가대표단(단장: 찰스 보이드(Boyd)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접견 (16일)
12. 16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다”
12. 16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북결과 브리핑 (미 국무부), “6자회담 재개시 비핵화와 연관된 모든 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진전, 평화협정,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 공급,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것”,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는 4개국(한·북·미·중)임을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동의”, “비핵화 논의 재개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
12. 17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이명박 대통령 예방 (청와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
12. 17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모스크바)
12. 23	북, 자칭 ‘해상군사분계선(‘99. 9 선포) 인근 해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서해 NLL 긴장감 조성
2010. 1. 1	북 신년공동사설, 근본 문제는 미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즉, 평화체제) 주장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

일 시	내 용
1. 4	이명박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남북 관계 개선 및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의제가 중요)
1. 7	현인택 통일부장관 조선일보 회견,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과 만날 용의 피력
1. 11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며 평화협정체결 회담과 함께 제재가 해제되면 6자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밝힘.
1. 11	크롤리 차관보,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9·19) 공동성명 하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
1. 12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 대사,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
1. 12	신선호 유엔주재 북대사, “우리는 제재가 풀리면 대화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에 복귀할 것”
1. 13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 외상, 북 평화협정 협상 제안은 “(핵 문제) 연기 공작의 구실이 될 우려가 있다”
1. 14	보즈워스 대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을 때 제재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미북간 추가 대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미주 한인의 날, 워싱턴)
1. 14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지문,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금강산 관광과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을 갖자”
1. 15	이윤성 국회부의장, 북한의 핵탄두 소형, 경량화 기술 빠른 시일 내에 가능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청 연설, 현지 14일)
1. 15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계획(비상통치계획-부흥) 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

